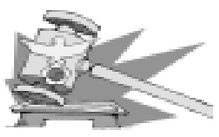
탈북자·인터넷은 새‘ 밥줄 ’

보안법 폐지논쟁으로 위기감,“ 먹고 살 길 찾아라 ”



국보법과 보안경찰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 등으로 위기감을 느끼는 보안경찰은 탈북자와 사이버공간으로활로를개척하고있다. 하지만탈북자관리는 탈북자 전체를 감시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안사이버전문요원을통한사이버공간감시는업무중복과정보인권침해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비판이제기된다.

●보안경찰이 탈북자 관리? =보안경찰은이미6천명을넘어선북한이탈주민을관리하는 업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변한다. 한경찰청보안국간부는‘ 보호 와‘ 관리 를 강조하면서“ 보안경찰이 탈북자 취업을 알선해준경우가 얼마나 많은줄아느냐 ”고 되묻기도했다.

경찰청 보안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탈북자 범죄예방을 위해 탈북자 밀집거주 지역경찰서에탈북자관리전담반14개 72명을지정운영하고있으며2년에걸쳐보안인력4백88명을증원해주도록행자부에요청한상태 ”라고밝혔다.

이에대해탈북자관리를보안경찰이하는 것은탈북자들을보안경찰의밥그릇을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다. 이와함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 지원에관한법률 ’상정부가 보호하고 정착을 지원해야 할 대상이자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들을 보안경찰이 관리해야 할 근거도없다는목소리가높다.

보안국에서는“ 탈북자 증가로 이들의 범죄도 증가 추세 ”라며 범죄예방과 지도 · 관리를 강조한다. 그러나 지난해 국감에서 나온탈북자범죄현황(2000. 1~2004 상반기)에 따르면탈북자범죄총8백45건가운데대부분은 폭력(2백94건)과 교통(3백62건)이었다. 국가보안법위반은한명도없었다.

이호영씨(건국대 대학원 석사과정)는“ 보안국이 탈북자를 관리한다는 것은 국가가 이들을 국가안보 위해 세력으로 보고 있다는증거 ”라며“ 탈북자복지와지원은행자부나보건복지부에서담당하고경호가필요하다면경찰청생활안전국이나경비국에서맡는게합당하다 ”고말했다.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사무국장도“ 보안경찰이탈북자를‘ 관리 하기위해서는탈북자들이매우구체적인현존하는위험집단이어야하는데그런게있느냐 ”며“ 모든탈북자를 대상으로 보안경찰이 어떤 역할을 해야할이유는어디에도없다 ”고꼬집었다. 오 국장은“ 보안경찰의 일상적 감시체제에 놓이게된다는점에서법이요구하는‘ 보호 나‘ 지원 ’과 배치되고 탈북자라는 이유만으로 일상적인권침해 상태에 놓이게된다 ”고 지적했다.

오 국장은 탈북자에 대한 보안경찰 활동에대해“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며 탈북자들에 대한 일상적 감시활동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에의해‘ 국가안전보장에현저한영향을끼칠우려가있는자 ’의경우국가정보원장이보호를결정한경우에는통일부장관의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이 이에 응해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일할 수 있다.

19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 경찰 옆을 지나가고 있다.

이정민 기자 jumi7126@nate.com

●정보인권 침해, 업무중복 =경찰청 보안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상 불온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검색과 의법조치 ”등을통해보안활동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 그러나경찰청은사이버테러대응책으로지난 2000년 9월 수사국에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이미설립한바있다.

기존 조직이 있는데도 보안국은 2003년 10월 보안사이버전문요원인사운영규칙을 제정했다. 지난해경찰청국정감사답변자료에 따르면 2004년 9월 30일 현재본청과각 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는 보안사이버전문요원은80명이다.

보안사이버전문요원은 인터넷에 실린 글을감정하고홈페이지폐쇄, 문건삭제같은 조치를 취한다. 경찰청 보안국은 지난해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최근 3년간 해외 친북사이트게시물등을내려받아국내사이트에게재, 유포한김아무개등국가보안법위반 사범 9명을 검거 사법처리(구속5 불구속4)하고 ID정지3건, 홈페이지폐쇄3건, 불온문건삭제4백65건을처리했다 ”고밝혔다.

강국진기자 globalngo@ngotimes.net

공안문제연구소 폐지 맞나?

통폐합 논란 내홍

공안문제연구소가이달말이면폐지될것으로 보인다. 정확히 말하면‘ 치안정책문제연구소 로 통합된다. 혹자는‘ 공안문제연구소가아직도안없어졌어? 라고말할지도모르겠다.

지난해 12월 경찰청이 경찰대 산하에 있어온 공안문제연구소를 폐지하고 치안연구소로통합하는개정법안을국무회의에올릴 것으로알려졌기때문이다.

개정법안은지난12월경찰위원회를통과했고현재차관회의와국무위원회의에상정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관회의 상정은 형식적인 것이고 개정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이돼야만한다. 개정법률안은긴급사안의 경우 그때그때 처리되지만 대개 상반기 제출된여러안을모아일괄통과시킨다. 국무회의에상정된이상공안문제연구소의치안연구소 통합안은 이달 말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사안이대통령령이므로국무회의의결만받으면되기때문이다.

치안연구소는 공안문제연구소와 통합되면서치안정책문제연구소로 명칭이바뀐다. 공안문제연구소는 지난 9월 국감에서 허성관행정자치부장관이감정서발급중단을지시한후부터감정업무는하고있지않다. 그러나 공안감정 업무를 담당했던 인력은 그대로남아있다.

최규식열린우리당의원실의박정서보좌관에따르면이중절반은치안정책문제연구소에 포함되고 반 정도는 내보내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한다. 그러나 인력 수용여부를 놓고 내부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보좌관은“ 이들도 국가공무원법으로 임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갈 대상으로 포함된이들측에서는‘ 행정소송까지가겠다 ’고 하는상황 ’이라고귀띔했다.

내부정리가 잘 안되고 있는 가운데 공안문제연구소측은최규식의원실에‘ 하반기로 통과를미루면 안되겠느냐 ’며연락을했다고한다. 이달말국무회의에상정돼있는공안문제연구소 통합 안을 빼달라는 얘기다. 박 보좌관은“ 공안문제연구소 보안국장이 연락을 해서 이런 이유를 대며 미뤄달라고 하는데‘ 안된다 ’고말했다 ”고밝혔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개혁 토론회에서“ 진정한의미의혁신작업이진행돼야한다면그에대한인적, 물적 청산부터시작돼야한다 ”고말한바있다. 공안업무를 담당했던 이들이 치안정책문제연구소라는새집에서과연다른어떤일을하게될까.

장경욱 민변 사무차장은 본지 572호에서“ 공안문제연구소가‘ 통합 되는 것은 결국 공안연구소가 유지되는 것과 같다 ”고 비난했다. 극우적인 시각의 사람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치안정책문제연구소의 내용적 변화가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것이다. 경찰측이인권단체들의 타깃이됐던공안문제연구소를눈에보이지만 않게 치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혁해나갈 것인지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는지적이많다.

조은성기자 missing@ngotimes.net

한총련이 먹여살렸다

썩은 동앗줄‘ 보안법 ’폐지되면‘ 명퇴 ’

지난해 뜨거운 국가보안법폐지논란 속에서보안경찰은살얼음판을걸어야 했다. 자신들의 밥줄인 국가보안법이 썩은 동앗줄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었다. 간첩검거가 주 업무인 그들에게 시대변화는‘ 명퇴 압박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더더욱 국가보안법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특히 공안문제연구소는 자신들의 조직을 보전해줄 근거를 만들어주는‘ 듬직한 ’파트너였다. 그러나 공안문제연구소가 지난 국감에서 사실상폐지방침이내려지면서이들은 더욱절벽에몰리게됐다. 이들의위기의식은 지난해 무리한 구속감행 등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여전히 자신들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실적 올리기에혈안이됐던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2천6백19명에 달하는 보안경찰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사람은 37명이었다. 구속자는 모두대학생이었다(거의 한총련). 2천6백19명이1년동안 37명을구속했다는 것은 71명의 보안경찰들이 일년에 단 1명의 대학생만을 구속한 꼴이 된다. 즉한총련이그나마그들에게일거리를주고그들을 먹여 살리고있는 셈이다. 특히 구속자는 모두“ 내맘대로 ”조항인 7조(찬양고무) 위반이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감옥에보낼이유가없는대학생들을 통해 자신의 밥그릇이나 챙기는 일은 이제그만둬야한다 ”고일갈한다.

지난해 10월 18일 YTN은 2003년 통계를 바탕으로 한달 평균 경찰 1인당 사건 처리 건수 비교결과를 보도했다. 그에 따르면 보안경찰은 0.0002건, 강력반은 6.5건, 조사계는 20.4건이었다. 또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구속된 사람은 5년 사이 80%가 줄었지만 담당경찰은 30%밖에 줄지 않았다. 공안수요 보다공급이과잉상태인것이다.

지난 2002년 7월 한총련 대의원 등 각 대학 총학생회 간부들이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 집단출두를 하자 경찰이 지하철역 입구에서 가로막고 있다.

이정민 기자 jumi7126@nate.com

최근보안부서는‘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방경찰청 보안과관계자에따르면“ 국가보안법논쟁 등으로 인해언론에 나올만한일은만들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 ”고 한다. 하는일도없이경로당화된조직, 보안법이 있어야만 일거리가 있고 목숨이 부지되는 보안경찰의 현주소. 그러나 보안법은 이미 썩은 동앗줄이라는 것을왜그들만모르는것일까.

조은성기자 missing@ngotimes.net

●보안 기관별 정보 수집 건수 및 비율 (기간-2004년 상반기)

전체 수집 건수		3067	미공개 건수		1078
기관	수집 건수	비율(%)	기관	수집 건수	비율(%)
국정원	102	5.12	경북지방청	27	1.36
기무사	96	4.83	전남지방청	81	4.07
경찰 본청	340	17.09	전북지방청	25	1.26
서울지방청	453	22.78	충남지방청	39	1.96
인천지방청	3	0.15	충북지방청	5	0.25
경기지방청	23	1.16	강원지방청	37	1.86
부산지방청	59	2.97	제주지방청	9	0.45
경남지방청	62	3.12	일선 경찰서	507	25.49
대구지방청	35	1.76			
울산지방청	86	4.32	총계	1989	100

※이 표는 2004년 국정감사 기간 중 공개된 경찰대 부속‘ 공안문제연구소 의 감정 목록을 분석하여 만들었다. 각 보안 부서는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를 공안문제연구소에 보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지 감정을 의뢰했고, 연구소는 감정후 해당문서명, 작성자, 감정 등급, 의뢰기관, 일자 등을 정리하여 관리해 왔다.‘ 미공개 는‘ 수사 중 이라는 이유로 공안문제연구소에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며, 기관별‘ 건수 와‘ 비율 ’계산은 공개된 것만을 기준으로 했다.